

# 최악 서민경제...생계형 절도 급증

고유가와 고물가로 인해 서민경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생계형 절도범이 급증하고 있다.

근년들어 국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철근과 구리선 등 건설자재는 물론, 고압 전류가 통하고 있는 전선까지 훔쳐가는 절도범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여기에 생활고를 시달린 서민들이 생계를 위한 절도 행각을 벌이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올 들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경제적 능력이 없어 차라리 노역장 유치를 택하는 사례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절도범 급증·생계형도 상당수=지난달 30일 김모(65)씨는 광주시내 한 개인 병원에 침입해 에어컨 동파이프 등을 훔쳐다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는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없는

## 생활고 속 생필품·기름 도둑 잇따라

### “벌금 대신 몸으로” 노역장 유치 자청

노숙자였다.

앞서 지난달 26일 경찰에 붙잡힌 김모(37)씨는 다른 사람의 체크카드를 주위 선풍기·압력솥·쌀·어린이 영양제 등 80여만원 상당의 생필품 등을 구입했다. 김씨는 직업도 없이 가족들과 함께 사글세 방에 살고 있었다.

지난달 17일 광주시내 한 주유소에서 종업원이 잠든 틈을 타 자신의 승합차에 기름을 넣고 달아났던 김모(31)씨의 경우는 고유가 시대 고달픈 서민들의 생활 단면을 단적으로 보여 주었다.

지난 2일에는 개인택시 운전사인 박모(57)씨가 길에 쌓아둔 양파 20kg(시가 7만2천원) 상당을 훔쳐 달아나다 순찰중인 경찰에 붙잡혔다.

올 상반기 광주와 전남지역의 절도범 퇴장 건수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200여건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6월 말 현재 광주·전남 지역 4개 교도소에 수감된 절도범은 939명으로 지난해 9월 말의 856명보다 10% 가량 증가했다.

◇“벌금 대신 몸으로 때운다”=최근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벌금 납부 대신

노역장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다.

광주지검에 따르면 올 상반기(1월~6월) 벌금을 내지 못해 노역장에 유치된 유치집행 건수는 1천31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천58건에 비해 24%나 늘었다.

매달 평균 219명이 벌금 대신 ‘차라리 몸으로 때우겠다’고 노역을 택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노역장 유치 건수가 급증한 것은 경기불황 탓에 벌금 납부 대신 힘든 육체노동을 택하는 사람들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벌금을 못내 노역장 유치를 선택한 경우는 2006년 2천53건에서 2007년 2천57건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올해는 경기불황 등으로 인해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늘고 있다”고 전망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대책회의 “촛불집회 주말에만 전념”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7일 “향후 평일 촛불집회는 각 부문단체들이 주관하고 대책회의는 주말인 12일과 17일 집회에만 집중하게 된다”며 대책회의 차원에서 더 이상 평일 촛불집회를 개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대책회의는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새로운 상황에 맞게 좀 더 지속적이고 완강하게 촛불을 확산해야 한다

는 취지”라며 “평일 집회는 단체간 조율이 필요하며 또 자율적으로 조절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책회의는 “촛불은 진화되고 발전해야 한다. 재협상이 될 때까지 광우병 재협상을 촉구하는 촛불은 지속된다”며 “다만 촛불을 추진하는 방식을 다양화한다는 의미에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광주지역 일부 종교단체들

은 촛불집회가 열리지 않을 경우 자체적으로 촛불집회나 기도회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촛불’이 쉽게 꺼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광주 기독교교회협의회와 불교사우연연합회는 국민대책위와 비상사국회의가 촛불집회 중단을 선언하더라도 자체적으로 촛불집회를 열 수 있다고 밝혔다.

◇“벌금 대신 몸으로 때운다”=최근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벌금 납부 대신

## 촛불 주최 종교인도

### 경찰, 사법처리 방침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집회와 관련해 시국 미사·기도회·법회 등을 주최한 종교인들에 대해 경찰이 사법처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한진희 서울지방경찰청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촛불집회 주최측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밝히면서 종교행사 명목으로 열린 촛불집회의 경우도 당시 나온 구호, 발언 내용, 거리행진 등 전체적 상황을 종합해 위법 여부와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청수 경찰청장도 이날 별도 기자간담회에서 5일 촛불집회를 예로 들며 “종교행사는 집시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면서도 “종교행사라도 도로를 장시간 점거하거나 그 위에서 연좌하는 것은 집시법 적용 대상으로 볼 수도 있다”고 밝혔다.

경찰의 이런 입장 표명은 지난주 서울광장에서 시국미사, 시국기도회, 시국법회 등을 개최하고 서울 도심문제를 비롯한 ▲임원선출 임시총회를 둘러싼 구속부상자회 내부 홍역 ▲5·18 기념제단과 관계 설정 및 대표성 논란 등 걸림돌도 만만찮다.

/이종형기자 gilee@kwangju.co.kr

## 5월 단체 통합 보인다

### 부상자회, 공법단체 결성 전격 찬성...내년 상반기 중 이뤄질 듯

5·18 부상자회와 5·18 민주유공자 유족회, 5·18 구속부상자회 등 5월 관련단체가 1980년 5·18 이후 28년 만에 하나의 공법단체로 통합을 눈앞에 두고 있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7일 국가보훈처와 5월 관련단체에 따르면 이들 5·18단체들은 최근 ‘하나 된 5·18 민주총량’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공법단체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동안 내부반발 등을 이유로 통합

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던 부상자회가 최근 이사회 표결을 통해 공법단체 결성에 전격 찬성함에 따라 5월 관련단체 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부상자회는 지난달 20일 실시한 ‘통합 공법단체’ 찬반투표에서 소속 이사 13명 중 10명이 참석, 과반수인 6명이 찬성했다. 이후 신경진 부상자회장과 정수만 유족회장은 최근 국가보훈처를 방문한 자리에서 “5월 관련단체 통합을 정부 입법으로 추진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이에 따라 5월 관련단체 통합은 정부 입법화 작업과 9월 정기국회 심의·의결, 예고기안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부상자회 내부 이견 조율 문제를 비롯한 ▲임원선출 임시총회를 둘러싼 구속부상자회 내부 홍역 ▲5·18 기념제단과 관계 설정 및 대표성 논란 등 걸림돌도 만만찮다.

/이종형기자 gilee@kwangju.co.kr



원산지 표시 확대 시행을 하루 앞둔 7일 광주시 남구청 공무원들이 한 초등학교 급식실에서 쇠고기와 쌀의 원산지를 일일이 확인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원산지 표시율, 쇠고기 높고 쌀은 낮아

쇠고기와 쌀 등에 대한 원산지표시가 대폭 확대된 가운데 쇠고기의 원산지표시 비율은 높은 반면, 쌀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광주시 북구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4일 동안 식품위생법 적용을 받는 관내 100㎡이상 음식점 549개소에 대해 쇠고기, 쌀 원산지 표시 지도 점검을 실시했다.

지도 점검 결과, 쇠고기 판매업소 138개소 가운데 원산지를 표시한 업소는 130개소로 94%에 달했다. 전체 138개소 가운데 국내산 쇠고기를 사용하는 업소는 95개소(68%)였고 수입산 쇠고기 사용업소는 43개소(32%)였다.

국내산 쇠고기 품종은 한우 84개(60%), 육우 10개소(7%), 젖소 1개

소였고 수입 쇠고기 생산 국가는 호주 41개소(29%), 뉴질랜드 2개소 등이었다. 이들 업소 가운데 국내산과 수입산을 혼합 사용하는 곳은 5개소였고 한우·육우·젖소를 섞어 판매하는 곳은 4개소였다.

수입산 쇠고기가 주로 사용되는 업소는 레스토랑, 패스트푸드점이고 갈비탕 및 냉면 육수 재료로도 많이 이용됐다.

또 쌀 원산지 표시는 전체 549개소 업소 가운데 386개소(70%)가 원산지를 표시한 반면 163개소가 미표시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

북구는 12월 12일부터 배추김치, 돼지고기, 닭고기 원산지 표시제도 시행에 대해 안내하고 홍보하기도 했다. /이종형기자 gilee@kwangju.co.kr

## 나원침 (7550) 김장두



다 중의 건축·산업지체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제작 및 상담관영

▶ 서울본사 : 02) 3445-0943

▶ 광주본점 : 061) 337-0571

## “폐지 수집 구역 침범했다” 주먹질

○주택가와 상가 등을 돌아다니며 폐지를 줍던 60대 노인이 자기 구역(?)을 침범한 80대 노인에게 주먹을 휘두르다 경찰서행.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H(65·남구 주월동)씨는 지난 6일 낮 12시께 광주시 남구 주월동 주택가 골목길에서 N(여·84·남구 서동)씨가 폐지를 줍고 있다 “왜 내 구역에서 폐지를 줍느냐. 너희 동네로 가라”며 실랑이 끝에 밀어뜨렸다는 것.

○H씨는 경찰에서 “손수레를 끌고 하루 종일 돌아다녀도 얼마 줍지도 못하는 데 내가 주로 돌아다니는 곳에 N씨가 폐지를 줍자 순간 화를 참지 못했다”고 말했다. N씨는 “이 동네에서 살지도 않으면서 구역을 나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H씨를 경찰에 신고.

○경찰은 결국 H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 /김철성기자 kps@

동양의 하와이! HAINAN

무안++하이난(삼아)직항 제주 수.토 4회 한일 ₩899,000~ 4명부터 출발가정 ₩999,000~

무안++장사(장가게)직항 제주 일.토 7회 한일 ₩649,000~ 4명부터 출발가정 ₩899,000~

장사(장가게) 직항

www.kimb.com

NAVER